"생활시설격리 못해"…코로나 전쟁에도 이기적인 입국자들

송정역 도착한 입국자 13명 중 10명 행정명령 무시하고 집으로 전국 첫 '3일간 격리' 광주시 오락가락 행정…반발하자 '없던 일로' 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 속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나서야

광주시가 미국·유럽발(發) 입국자를 대 상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3일간 생활시 설격리'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개념 없는 입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도 자가 격리자 추가 발생과 방문업소 폐쇄, 지역 사회 전파 등 연쇄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입국자들의 반발에 밀려 스스로 행정명령 을 강제하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 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 입국 자들에 대한 검역과 자가격리 중요성이 커 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태라는 점을 감 안, 행정명령을 어기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 시 16분 KTX열차로 광주송정역에 도착 한 미국·유럽발 입국자 13명 중 3명은 '3일간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한다'는 광주 시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택으로 귀 가했다. 광주시가 지정한 생활격리시설인 5·18교육관으로 이동한 10명 중 7명도 이 날 교육관을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유럽과 미국 입국 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말 뿐인' 행정명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

광주시의 경우 이날 송정역에 내린 입국 자들이 치료시설 격리 방침에 반발하자 슬 그머니 스스로 내린 행정명령을 거둬들이 고 귀가토록 하는 '무소신' 행태를 드러냈

일부 입국자 가족들이 "사전 통보 없이 격리시설로 이송해간다"며 반발했기 때문 으로, 광주시는 경찰에 인력 지원까지 요 청했지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가 가족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영국 파견 근무를 마치 고 입국한 뒤 광주의 생활격리시설에서 격 리중이던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목포에서도 태국에서 귀국한 남성이 자 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다 확진 판 정을 받으면서 다녀간 시설이 영업을 중단 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생활시설 격리 명령 이 국내 신규 확진자의 20~30%가 해외에 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선제적으 로 취해진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보다 앞 선 적극적 검역 대책임이 확실하지만 현장 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는 평 가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 만 강제수용을 할 수는 없었다"며 "철저한 자가격리를 약속받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다녀간 유학생 모녀(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 31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6개 미세먼지 배 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전남·제주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

위반 유형으로는 방지시설을 부적정하 게 운영한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업체는 고장, 훼손, 부식, 마모 등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시설을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4건, 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산강환경청은 위반 수위에 따라 검찰 로 송치하거나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 과 및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에 늘어난 일회용품…재활용 선별장 안전점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일회용품 배출량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 31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대촌동의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 처리 상황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빛원전도 코로나 비상 모드…5호기 정비 인력 1200명 영광으로

대구·경북 등서도 100여명

영광 한빛원전도 코로나19 비상 모드

한빛 5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앞두고 자칫 국내외에서 영광을 찾는 원전 정비 인력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어 질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뜩이나 한빛 3·4호기가 장기간 가동을 멈춘 상황 에서 지역민들에게 또다른 불안감을 주 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다.

우선, 한빛원전 5호기 정비를 위해 영 광을 찾는 인원만 1200명에 이르고 공사 기간도 8월까지 4개월이 넘는다는 게 원

자력본부 설명이다. 1200명의 공사 인력 이 한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공정별 날 짜와 위치별로 투입 시기가 다르다.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대 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에서 오는 인력 만 104명이나 된다.

특히 2주 전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던 인력은 6명이다. 한빛원자력본부측은 2 주 동안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의심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인력만 투입 하겠다는 입장이다. 3명은 영광 현지에 서 자가 격리중이며 나머지 3명은 5월 이

후에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원전 시설 정비에 필요한 외국 인력도 투입 시기를 조심스럽게 조율하고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의 20%가 해외에서 유 입되는 현실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미국 인 근로자 2명이 지난 27일 입국한 뒤 검 사를 진행한 상태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1명은 영광 숙소에서 대기중이고 나 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측은 이같은 점을 감 안, 애초 지난 25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하려던 일정을 오는 5일로 미뤘다가 또 다시 10일로 연기했다. '돌다리를 두

드려보고 건너겠다'는 심산이다. 한빛원전 측은 이번 한빛5호기(가압경 수로형, 100만kW급) 제 13차 계획예방정 비공사를 통해 ▲증기발생기 교체작업 ▲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부 개선 ▲CO2소화 설비 개선・수계 소화설비 전환공사 ▲저압 터빈·주발전기 점검·복수기 점검 등을 진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개인별 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출·퇴근시 2회 체온 측정, 열감지 카메라 측정, 손씻기 등)를 강화하고 도시락으로 개별적 중식을 유 도해 집단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 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공무직 밀린 임금 받는다

2억 3943만원 지급 합의

광주복지재단 공무직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 2억 3943만 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 면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소속 공무직노동 조합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키로 합

복지재단 소속 공무직 노조원들은 지난 해 6월 23명 명의로 '재단측이 토요일 유 급수당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 기준법을 무시한 관리규칙을 삭제했으며 시간 외 수당을 미지급했다'며 밀린 임금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냈다.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재단과

노동조합의 중재에 나서 최근 양측의 합 의를 이끌어냈다.

재단 측은 토요일 유급수당과 시간 외 수 당 지급을 약속했다. 다만 시간외 수당의 경우 근로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해 노조원 요구사항에서 일부를 제외하 고 2억 3943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주장한 정규직과 무기계약 직의 차별대우했다는 데 대해서는 논의대 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이 청 산되면 사건을 취하한다'는 협의내용을 토대로 미지급한 임금이 지급되면 사건을 종결 처분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학 도서관서 상습 절도 광주북부경찰, 3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31일 대학 도서관 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트북 3대와 식료품 등 350만원 상 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도서관을 폐쇄했지만 A씨는 일부 단과대학에서 개방한 도서관을 찾아다니 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조사결 과, 훔친 노트북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 거나,도서관에서 훔친 즉석밥 등 식료품 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취약계층 줄 마스크 빼돌려 지인들 주고 생색 낸 이장·통장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

주며 '생색' 낸 이장·통장이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설 처지.

○…지난 3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인권 ·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이 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들에게 무상 배포하라고 지급한 마스크 200장을 알고 지내던 식당주인에게 건넨 화순군 A

○…취약계층 등에게 (57) 이장과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마스크 332장을 지인들에게 뿌린 B(72) 통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검찰은 화순군 이장의 경우 공적 신 뢰 저해사범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 했지만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 수 집 등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기각하자 2 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